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

2022. 8. 3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수출입 동향 및 전망	1
II. 수출 현장의 목소리	2
III.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3
IV. 세부 추진 전략	4
1.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4
2.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10
3.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향상	15
4.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21
V. 향후 추진 계획	22

I. 수출입 동향 및 전망

1 '22.1~7월 수출입 동향

- (수출)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4,111억불) 달성
- (수입)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상 최고(4,264억불) 기록
 - * 원유·가스·석탄 수입은 1,066억불로 전년동기(566억불) 대비 501억불(89%) 증가
- (수지) 4개월 연속 적자로 7월까지 무역적자는 △153억불 기록
 - * 에너지 수입 의존 산업선진국 무역수지 악화: (일본) '22.1~7월 △9.3조엔 (독일) '22.1~7월 △64%
- 3대 에너지원 수입 증가분(501억불)이 무역적자 규모(153억불) 상회

< 지역별 수출비중 및 무역수지 변화('21.7→'22.7 누적)(단위: %, 억불) >

	對중국	對미국	對아세안	對EU
수출비중	25.0 → 23.0	15.4 → 15.8	16.4 → 18.6	10.3 → 9.8
무역수지	137.0 → 35.7	125.2 → 176.7	205.7 → 287.3	△15.2 → 13.8

* 對중 무역흑자 감소분(101.3억불) < 對미·아세안·EU 무역흑자 증가분(162.1억불)

《 수출입 리스크 》

- ① (글로벌·중국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 긴축정책, 中 도시 봉쇄 등에 따른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으로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 * '22년 경제전망(IMF, '22.1월→7월, %) : (세계) 4.4 → 3.2, (미국) 4.0 → 2.3, (중국) 4.8 → 3.3
- ② (반도체 가격하락)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둔화로 가격하락* → 총수출 (반도체 비중 20%)에 직접 영향
 - * 반도체 가격(D램 고정가, \$) : ('21.4Q) 3.71 → ('22.1Q) 3.41 → (2Q) 3.37 → (3Q) 2.88 → (4Q) 2.50
- ③ (높은 에너지價) 러·우 전쟁 등으로 높은 에너지가격과 불확실성 지속 예상
 - * 가스가격은 ①러産 가스 공급 불안정, ②동절기 재고 비축을 위한 수요확대 복합 작용

2 연간 수출입 전망

- (수출) 기존 최고실적('21년, 6,444억불)을 넘어 수출 세계 6위 달성이 기대되나 세계경기 약세로 하반기는 상반기 증가율(+15.6%)보다 둔화 전망
- (수지) 에너지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적자 확대 우려

◇ 상품·경상수지(한은기준)는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나, 무역적자(통관기준) 및 당면 리스크를 엄중히 인식하고 수출 총력 대응

Ⅱ. 수출 현장의 목소리

1 그간의 경과

- 정부는 12개 업종별 협회 및 경제단체 간담회, 릴레이 수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6~8월)

* (6월) 12개 업종별 협회 면담, 경제 5단체 간담회
(7월) 수출 현장 릴레이 현장 방문 (8월) 업종별 수출상황 점검 회의

- 수출 기업이 제시한 애로 및 규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 방침 결정(7월 비상경제장관 회의)

2 수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

- ① (향후 여건) 수출기업 44%가 향후 수출환경 악화 전망

* [개선] 23.3% [유지] 32.4% [악화] 44.3% ('22.7, 무역업계 318개社 조사)

- (업종별)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 등은 증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전년수준 유지, 조선은 감소 전망('22.8, 업종별 협회)

<업종별 연간 수출전망>

악화	현상 유지	개선
조선	△ (소폭개선) 반도체, 섬유, 기계, 車부품 △ (소폭악화) 바이오, 디스플레이, 가전	석유제품, 油化, 자동차, 이차전지

(악화) 전년대비 수출 5% 이상 감소, (현상유지) 수출 △5~5%수준 (개선) 수출 5%이상 증가

- ② (수출 지원) 무역금융, 물류,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인증 등 4대 수출 활동에 대한 우선 지원 요청
- ③ (애로·규제) 경영환경, 물류·통관, 친환경 전환, 新산업 분야 애로 및 규제 139건에 대한 적극적 개선 요청
- ④ (경쟁력 제고) 업종별 협회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지원 요청

◇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적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

Ⅲ.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비전 안정적 무역 확대에 기반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

목표 무역수지 개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세부
추진
과제

1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 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
- 성장단계별 중소 수출기업 역량 강화 · 지원
- 현장 규제 ·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걸림돌 제거

2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 (중국) ICT융복합 · 첨단소부장 · 그린산업 지원, 협력채널 강화
- (반도체) 투자 · 인력 · 기술 등 산업경쟁력 향상, 수출지원
- (에너지수입) 연료 대체, 에너지 수요 효율개선

3 수출산업 본원적 경쟁력 향상

- 주력산업 경쟁력 초격차 유지
-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 성장 지원
- 방산 · 원전 ·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성과 도출

4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정기 개최
- 산업부장관 주재 「무역상황점검회의」 수시 개최
- 민관합동 「수출현장지원단」 가동

IV. 세부 추진 전략

1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 확대

(1) 수출 활동 지원 확대

◇ 원자재 가격 급등, 高금리 등 중소기업 자금난 직면, 정부는 수출 금융, 물류비, 해외인증 지원 확대 필요 (수출 유망산업 간담회, '22.8월)

① 무역 금융을 최대 351조원까지 공급(역대 최대 규모)

- (공급 한도) 무역보험 '22년 연간 체결한도 상향 추진(230 → 260조원) → 기대효과 최대 공급 여력 확보로 기업 실수요 대응

무역금융 공급 세부 계획(조원)

구분	무보	수은	신·기보	중진공	합계
당초 목표(경정)	175	69	16.8	0.4	261
7월(비상경제장관회의)	210	74	16.8	0.4	301
8.31(비상경제민생회의)	최대 260	74	16.8	0.53	최대 351

- (기업별 한도) 수출품 선적前 수출신용보증 한도(무보) 상향 → 기대효과 여신한도(외국환은행) 소진 기업도 추가 제작자금 대출 가능

* (현재) 중소·중견 50억원 → (개선)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 (금리우대) 수출 중소기업 한시적 금리 우대 조치(수은, ~'23.8) → 기대효과 기업 금리 부담 완화(약 1천개社, 최대 1%p)

- (수입보험)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12월까지 한시적 확대 → 기대효과 수출 기업 원자재 수급 지원 강화(9월)

* (품목) 주요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 → 제조기업限 네거티브 전환(사치·소비재 제외)
(한도) 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 (中期보증) 新산업,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 기대효과 장기간 안정적 자금운용 가능

* (지원대상) ① 신산업, 소부장 등 산업 특성상 장기자금 확보 필요 업종,
② 혁신성장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 업종

② 물류비 추가 지원, 화물반입 규정 완화 등 물류 부담 완화

- (물류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비 90억원 추가 지원(750개社) 및 항공(최대 15%)·특송운임(77%) 할인** 제공(9월~)
 - * (기존) 3,800개社(320억원) 既지원 → (추가) 해외물류센터, 물류바우처 90억원 지원
 - ** 대한항공 협업 中소화물 운송지원 노선 추가(기존 독일→일본) 및 운임 할인, (기존) DHL, UPS, FedEx 등 운임할인(32~66%) 지원중 → DHL 할인폭 확대(50~77%)
- (수입물류) 원자재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대상 기업을 수입기업까지 한시 확대(9월~)
- (특별용자) 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약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용자 지원(8월~, 무협)
 - * 금리 연 2~2.5%, 용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억원
- (화물반입)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內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확대 검토(現 3→4일) 하여 창고보관료 등 부담완화(9월~)
 - * 터미널 장치율 상황을 모니터링 후 필요 시 기간 재조정

③ 해외전시회, O2O 상담회 등 현지 마케팅 지원 강화

- (해외전시회) 수출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범 실시(9월~)
 - * ('22上) 통합한국관 33회(765社), 개별 610社
→ ('22下) 통합한국관 64회(1,600社), 개별 1,800社 지원
 - ** ①(한국관 품질향상) 통합한국관 고급화 시범실시
②기계, 건축자재 등 큰 전시공간이 필요한 전시회 복수 부스 시범제공(5부스 內)
- (O2O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오프라인), 화상상담(온라인)을 결합한 O2O 수출상담회 '봄업 수출 코리아(11월)' 개최(10억원)
 - * 첨단소부장·바이오헬스 등 유망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바이어 연계(2,000개社 지원)
- (권역별 맞춤지원) 北美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협력, 中,CIS,베트남수교 기념 계기 경험 아세안소비재 및 산업기술 협력사업 확대
 - * 북미 2022 북미 AUTO Tech(9~10월), K-Global@SV(11월), CIS 한-카자흐 30주년 O2O상품전(10월), 아세안 한-태국 협력 포럼(10월), 하노이 한류박람회(10월) 등

4 해외인증 획득 지원, 지재권 보호를 통한 新시장 진출 촉진

- (해외인증) 수출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하반기 집중 지원*(9월~, 20억원, 130개社)
 - * 사전상담, 제품시험, 인증 등 인증획득 위한 제반비용 지원
- (인증 대행) 국내 시험 인증기관에서 주요 해외 인증(CE(유럽), UL(미국)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확대
 - * 국내 인증기관(KTR, KCL, KTC, KTL)과 해외인증기관(TUV, BV, SGS 등)간 MOU 체결
- (지재권 보호)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전문기업(NPE) 등의 특허소송 대응* 및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지원강화('23~)
 - * NPE 등 해외기업과의 분쟁기업에 무효조사, 비침해입증, 라이선스전략 등 지원
 - ** 피해기업에 위조상품 실태조사, 경고장발송, 행정단속, 민사소송 등 맞춤형 지원

5 절차 간소화, 무역장벽 해소로 기업 친화적 통관환경 구축

- (수입신고 수리前 반출)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前 반출 허용(9월~)
 - * (혜택) 세부담 완화(완제품 세율 적용), 자금 유동성 확보(최종수입분까지 징수유예), 신속통관
- (수출 보세공장 반입) 반도체 등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원자재·설비 등 품목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 허용(11월~)
- (전자상거래 통관) 일부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특송물품 수출 목록통관*을 전국 모든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12월~)
 - * 물품명, 발송인 등 간략한 사항만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
 - ** (목록통관 제출 세관) 인천, 평택, 김포 세관만 허용 → 전국 세관 모두 허용
- (해외통관) 관세 추정 등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품목분류 분쟁 해결*, AEO MRA** 및 원산지 증명서 전자적 교환 체결추진
 - * WCO(세계관세기구) 의제 상정·합의 도출, 관세청장 회의, 전문 협회 협업 등
 - **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시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등 혜택 부여

[2]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수출 중소기업 수**(수출기업의 95.8%) **정체**는 수출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저변 지속 확대 필요**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① 내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 (내수기업)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수출 첫걸음 통합지원 및 수출실적 없는 초보기업 대상 수출성장금융** 500억원 제공(10월~)

* 물류(삼성SDS, Fedex), 통관(관세청), 법률(법무부, 특허법인), 금융(기업, 신한)

** (현행) 수출실적 기반 한도심사 → (개정) 자본금 등 재무상태 기반 한도심사

-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22上 730개社 발굴)을 대상으로 수출 쏠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확대

* 수출실무교육→디지털 콘텐츠 제작→온라인 플랫폼 입점·판촉 지원→사후관리

** 10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1,300억원 추가 지원(7.25~)

-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과 협업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지원, 스타트업 거점무역관 중심의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

* 글로벌 기업 및 해외기술실증처 다양화(연구소, 병원)로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확대

** 현지 테스트베드, 레퍼런스 확보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글로벌점프 300) 연간 운영

② 디지털 수출 인프라 확충(국정과제)을 통한 수출 문턱 완화

- (종합지원센터) 콘텐츠 제작·입점·물류·금융 등 온라인 수출 쏠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 확충

* 종합지원센터 : ('21) 6개소 → ('22) 9개소 → ('23) 12개소 → ('27) 전국 30개소

- (무역상사·인력)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무역상사 육성 및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 무역상사) '23년 100개사 시범운영, (전문인력) 민관협업 5년간 1만명 양성

- (상품정보 DB화) 수출잠재력이 있는 10만개社를 선정하여 상품정보를 다국어 디지털 자료(이미지, 동영상, 3D)로 작성·DB화

* ('22, 시범사업) 1만개사 → ('23) 3만개사 → ('24) 5만개사 → ('25) 10만개사

(3) 핵심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걸림돌 제거

◇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에서 제시한 4대분야 건의과제 139건 관계부처 검토 → 33건 연내 완료

□ (연내 해결과제) 4대 분야 핵심 규제(33건)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수출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 조기 해소

수출기업 규제·애로해소 주요사례

① (경영여건)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12월)

기대효과 '25년까지 바이오납사 수입비용 90억 절감(수입 1만톤당 23억원 절감)

(사례) 바이오납사를 수입하는 A社は 석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상 징수대상(HS코드 기준)으로 분류되어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어 경영부담 증가

② (물류·통관)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상시 반출입 허용 및 신고생략) (보세공장고시 개정, 11월)

기대효과 R&D 센터로 상시 반출입이 가능해져 연구개발 지연 예방

(사례) 반도체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B社は 공장 물품을 R&D센터로 옮겨 테스트 하기 위해 매번 수입신고→심사→수리 절차를 거치고 있어 연구개발 지연

③ (新산업)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前 검역완료 처리하여 연구·생산활동 촉진(검역기준 개정, 12월)

기대효과 검역절차를 단축하여 원재료 물품변질 방지 등 비용 절감

(사례) 바이오원재료를 수입하는 C社は 검역 제외승인을 받기 위해 입고 후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물품이 변질되는 경우 발생

④ (친환경)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E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재생E 직접전력거래고시 제정, 9월)

기대효과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직접구매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 대규모 설비 보유기업과 동일한 가격협상력 확보

(사례) 중소기업 D社は RE100 참여를 위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를 활용하고 싶지만, 협상력이 적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 발생

- (규제혁신TF 논의과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52건)는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화

규제혁신 TF 논의필요 주요 과제

구분	대표사례	소관부처
기업 부담 완화	① 공장 압력밸브 안전검사 주기 합리화 (1년 → 최대 4년)	고용부
	② 외국인근로자 업체별 고용한도 확대	고용부
	③ E-7 비자발급 기준(소득·숙련도·학력 등) 완화	법무부
	④ 평균연비·온실가스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중복규제 완화	환경부
물류 & 통관	① 수입통관 수정신고시 관세 납부기한 개선 (익일 → 5일내)	기재부
	② 보세공장용 기계·부품에 대한 관세 유보	기재부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품목을 대신 수입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중기부
	④ 보세공장 내 제조용 원재료 수입의 경우 요건확인 면제	산업관세 등 관계부처
新산업 육성	① 전동지게차용 배터리 규격 및 인증제도 마련	국토부
	② 전기동력 건설기계 보조금 확대	환경부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MICE 산업 독립분류	통계청
	④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상호인정협정 추진	식약처
	⑤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속화 (인력 총원 등)	식약처
친환경 전환	① 재생원료 사용제품 인증제도 마련	산업부
	② 철스크랩 순환자원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환경부
	③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산업부

- (추가검토 과제)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 투자 지원강화(세제 등) 등 추가 검토 필요 과제(54건)는 중장기 추진

2 수출입 3대 리스크 대응 강화

◇ 對中 수출 위축,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가능성 등 3대 리스크 집중 대응

(1) 對中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 경제협력 강화

◇ 약 25%에 달하는 對中 수출 비중을 고려할 때, 對中 수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원 필요 (對中 수출기업 간담회, '22.7월)

① ICT 융복합·첨단소부장·서비스 등 신규 수요 산업협력 강화

- (新제조업 협력)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등 한-중이 모두 육성하고 있는 제조 산업 분야 맞춤형 협력 강화

공통 육성산업 맞춤형 산업협력 방안

GP(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1:1 핀포인트 상담	기술협력 교류회 (포럼, 세미나 등)	현지 박람회 참가	디지털 현장실사
-----------------	-------------	----------------------	-----------	----------

- (첨단소부장) 中 소부장, 공급망 분석을 통해 조선기자재, 항공, 이차전지 등 분야 對中 유망 소부장 발굴·협력강화

* 한-중 소부장 협력관계 분석, 중국 내륙 및 2-3선 도시 수요 발굴 및 사업화

** 광시 자동차 GVC 진출 파트너링 플라자(9월), 다렌 조선기자재 O2O 상담회(10월)

- (ICT 융복합) 中 시장 타켓형 ICT 혁신 스타트업 발굴·지원 및 5G, 신소재, AI 로봇 분야 민간 산업 협력 촉진

* 中 자본 투자유치, 중국 사업 파트너 매칭, 현지시장 조사, 언어지원 등

**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9월), 한-중 미래 혁신 산업 대전(10월)

- (서비스 협력) 문화 콘텐츠(게임·영화·방송 등) 교류협력 확대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계기 전략적 시장 개방 추진

- 서비스 중점 무역관 지정, 서비스 글로벌 파트너링(GP) 신설, 對中 서비스 수출 협의회 구성 등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확충

② 中 2060 탄소중립, 제로 코로나 정책 맞춤형 수출 지원

- (친환경·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4대 對中 전략 그린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

4대 전략 그린산업 수출 확대 전략

스마트시티	· 우한 등 수요지역 內 환경기업, 지방정부와 기술수요 협의 ·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통한 국내기업 프로젝트 참여지원
스마트팜	· 한-중 스마트팜 포럼(항저우, 11월), 기술교류·구매상담회 개최 · 하얼빈, 청두 등 수요지역 대상 한국 스마트팜 기술 홍보 강화
신재생에너지	· 中 전력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확대, 관련기술 도입 수요 관련 국내 우수 기업 매칭·홍보 강화
그린모빌리티	· 수소연료전지, 패배터리 재생기술 등 분야 현지수요 매칭 지원

- (온라인 소비) 中 온라인 소비 시장 확대 및 소비촉진 등에 맞춰 한국 소비재에 대한 對中 디지털 마케팅 지원 강화

- 中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구축, 현지 한국 상품전 개최 등 O2O 마케팅 확대, 지역별 유력 유통망 발굴·입점 지원

* (온라인) 위챗 기반 韓品優選 등 中 맞춤형 통합·오픈형 모바일마케팅 확대
(오프라인) 다렌 한국상품박람회(9월), 중-아세안 박람회 한국우수상품전(9월)

③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간 고위급 협력 채널 활성화

- (산업·통상장관회의) 공급망, 교역·투자, 新 통상의제 등 관련 상시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안정적 기업 활동 지원 추진(22.下)

- (경제장관회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정례화(8.27 既개최)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 공급망 논의

* 중국 당국이 在中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국간 정책 소통을 지원하는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 신설

(2) 반도체 산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지원 강화

◇ WSTS(美) 반도체 성장률 전망치('22.8)

- '22년 13.9% (메모리 8.2% 비메모리 16.1%) → '23년 4.6% (메모리 0.6% 비메모리 6%)

① 투자촉진,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기업투자) 향후 5년간 투자 340조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지원 강화
 - 신속 인허가 및 규제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 혜택 강화
- (인력) 민관 협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전문인력 15만명 이상 공급
 -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하여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주도의 산·학 협력 4대 인프라*를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 ① 인력양성기관, ② R&D, ③ 장비 지원, ④ 대중소 상생 협력
- (선도기술) '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기술확보 및 개발 지원
 - 3대 차세대 반도체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 (소재·부품) '30년까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분야 자립화율 50%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 수립·시행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차질없는 추진으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및 경기 대응능력 강화

② 팹리스·소부장 中企 대상 해외 고객 발굴, 현지마케팅 지원

- (수요처 발굴) 美·中 개최 글로벌 IT전시회 내 한국관 운영 및 해외 자동차, IT업체-국내 팹리스간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한국관 운영 : SEMICON CHINA(상해, 10월), SC22(달라스, 11월) 등

- (현지 마케팅) '한중 시스템IC 협력연구원(심천·상해)' 중심 국내 팹리스 기업 中 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고객 매칭 확대

* 국내 팹리스의 중국 현지 오피스 공간 제공, 온라인 매칭 플랫폼인 COMPASS 내 美, 中 소재 수요업체 참여 및 DB 정보 확대

③ 반도체 특화형 단기 무역 금융 지원 강화

- (단기 유동성 지원) 반도체 기자재 수출 中企 대상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 수출 보험 우대, 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 추진

반도체 기자재 수출 中企 단기적 유동성 등 지원 방안

수출신용보증	책정 가능한도 1.5배 우대, 보증료 20% 할인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총액한도 1.5배 우대, 보험료 20%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 (설비투자 지원) 국가첨단 전략산업 생산 설비·장비 도입자금 지원 시 신용 우량 기업대상 물적담보 제공 의무 완화*

* 반도체 장비에 대한 물적담보권 실행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설비에 대한 기술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으로 적극적 공급망 투자 유도

(3) 에너지 수입수요 관리 및 수요 효율화 추진

◇ 무역적자의 주원인은 에너지 수입액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유도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① LNG, 석유를 他연료로 대체하여 에너지 수입액 절감

- (LNG) 고가의 LNG 수요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원료로 LPG 혼합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체 및 발전용 LNG 연료 대체 추진
 - * LPG 혼소(동절기 LNG 수입액 △ 8.8억불), 산업체 연료전환(도시가스→LPG, △ 4.9억불),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 LPG 히트펌프 보급,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확대 등
- (석유) 바이오디젤 등 기존 석유대체연료 사용 확대 및 신규 대체연료(바이오선박유, 항공유 등) 상용화 기반 마련
 - *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 확대, 신규 대체연료 기술개발, 업계 지원 등을 포함한 「석유대체연료 확대방안」 수립 예정('22.9)

② 효율 개선 및 효율투자 세제 지원을 통해 수요 절감 유도

- (효율개선)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효율화 추진
 - － (산업) 多소비기업 30개社 대상 효율혁신협약(KEEP 30) 추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본격 도입('23~)
 - * 한전·가스公 등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향상(고효율기기 보급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 (건물)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22.7~)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관리 성과모델 확산
 - * 주변세대 등 평균보다 높은 전기 절감률 달성시 캐쉬백(kWh당 30원) 제공
 - － (수송) 전기차, 중대형 승합·화물차의 연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비 측정방식 일원화
 - * 전기차 전비(電費) 등급제, 중대형 승합·화물차(승용차 比 에너지사용 7배) 연비제 도입 및 에너지소비효율, 1회 충전주행거리 과다표시에 대해 결함시정 또는 경제적 보상 조치
- (효율투자 인센티브)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 공제대상에 추가 검토('23~)
 - * (검토대상) 산업용 고효율 유체기계, 고효율 전동기 소재·설계·공정기술 등

3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향상

◇ 12개 협회 업종별 성장전략 제시 →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 주력 산업의 초격차 전략 유지

① (투자확대) 고도화·친환경화 R&D 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 *미·EU 수준 적극적 투자 인센티브, 친환경화 지원 필요* (반도체 협회)

- (R&D) 주력 품목 고도화 및 친환경화를 위한 정부 R&D 약 3.7조원 지원 예정('22~'26, 중기재정계획 기준)
 - *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첨단·스마트기계, 자율운행, 저탄소 화학소재,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 (세제·규제개선) 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뒷받침

업종	주요 품목별 투자확대 지원 방안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대기업, 6~10%→ 8~12%)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철강	철강산업 탄소 감축 등을 위한 R&D('22년 519억원)
조선	자율운행·친환경선 등 미래선박 R&D ('22년 244억원)

② (인력양성) 전문인력 및 현장形 기술인력 양성 지원

◇ 초격차 전략을 위해서는 *산업·전문인력 선제적 공급 필요* (조선 협회)

- (전문인력) 석·박사 R&D·설계 인재 양성,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수출 업종 분야 전문인력 총 14만명 양성('22~'26)
 - *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R&D),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사업 등 정부 인력 양성 사업 중기재정 계획 기준
- (현장수요 대응) 대학 특화과정 신설, 산업별 SC(20개 협·단체) 연계,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계 현장 수요 대응
 - * 첨단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 신설 예정

업종	주요 품목별 인력 양성 방안
반도체	반도체 아카데미, 한국형 SRC 등 민관합동 인력양성(~'31, 15만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계약학과, 특화과정 신설
조선	조선인력 양성사업(~'27, 7,500명)
자동차	미래차 전환 인력 양성(~'30, 3만명)

③ (공급망 안정) 공급망 정보 고도화 및 수입선 발굴 지원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지원 필요 (자동차 협회)

- (공급망 정보) 공급망 정보시스템 구축(관세청, KTNET, 기진회 등)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및 공급망 전략 수립 지원
 - * 주요품목 관련 가치사슬·수급현황 분석 제공 및 국내외 위기장후 발생시, 이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
- (수입선 다변화) 원자재 관련 통상협력 강화 및 동남아 등 新 시장 거점별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협의회 구성(코트라)

업종	주요 품목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油化	핵심화학 소재 24종 GVC 맵 구축, 품목별 얼라이언스 구축('23년)
가전	국내 소부장 기업 양산성능평가 지원
자동차	車반도체 국산화 및 전기차 핵심 광물 비축 확대

④ (新시장 진출) 전략시장 맞춤형 마케팅 및 통상대응 강화

◇ 업종별 특성과 전략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지원 필요 (기계 협회)

- (전략시장 지원) 특화 전시회, 현지화 지원, 대기업 해외진출 연계 中企 동반진출 등 업종별·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 (통상대응 강화) 통상분쟁 대응, 신규 FTA 조기 체결 등을 통해 주력품목의 新시장 진출 장벽 제거

* 모바일 OLED 패널 한-인도 CEPA 적용, 한-GCC, 한-멕시코 FTA 등

주요 품목별 시장 진출 지원 방안

업종	주요 품목별 시장 진출 지원 방안
기계	농기계, 금형 등 ODA 연계 신흥시장 진출 지원
조선	세계 양대 조선박람회 한국관 구축
가전	유럽向 초 프리미엄 생활가전 수출지원 (독일 IFA 참여지원 등)
자동차	미, EU 친환경차 수출 확대를 위한 IRA 등 적극 대응

[2] 수출 유망 산업 성장 지원

① (바이오)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유망분야 시장선점

◇ R&D 전문인력 확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확대 및 글로벌 공급처 매칭 등 지원필요 (바이오협회)

- (유망분야 지원) 화이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 선제적 지원을 통해 시장선점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법 제정, 주요 서비스 대상 1만명 이상 실증사업 등 추진

- (인력양성) 바이오공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22~'26년, 1.1만명) 및 K-NIBRT 인력양성 사업* 신속 추진

* (K-NIBRT 사업) 21~23년 시범교육 → '24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완공 후 年 2천 명 양성

- (바이오 소부장)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분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D 지원중('20~'25, 1,132억원)

→ '소부장 자립화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국산화 추진

- (무역금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특별지원 지침마련 → 총액한도 증액 및 보험우대

* 한도 증액 ('21) 12.8억불 → ('22) 20억불 / 보험우대 : 보험·보증료 할인 등

② (2차전지) 혁신 기술 선점 및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 등 공급망 이슈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전지산업협회)

- (최신제품 개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수요기업 연계형 R&D** 확대 등 최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출 모멘텀 지속

*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21~'23, 240억원), 차세대배터리파크('22~'25년, 472억원)

** (주요사례, 포스코케미칼) 소부장 R&D예산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기술을 확보 → '23년부터 배터리 기업에 본격 납품 예정

- (공급망 안정화) 핵심광물·소재 수입국 다변화*·국산화 병행 및 정부·업계·광업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의체 연내 신설
 - * 리튬(중국/칠레→호주/아르헨/캐나다), 니켈(중국→인니/호주), 흑연(중국→탄자니아) 등
- (무역금융)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 등에 대한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 증액('21, 8억불 → '22. 21.5억불)
 - * BMW(독일), VOLKSWAGEN(독일), FAC ITALY(이태리), AUDI BRUSSELS(벨기에)
- (정책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22.8월 시행)을 근거로 입지·인프라·절차 간소화 등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및 소재기술 관련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확대 (6~10%→8~12%)

③ (소비재) 지역별 맞춤형 전략수립 및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 제조 중간재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구조 탈피를 위해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전략 마련 필요 (무역협회)

- (권역별 진출지원) 권역별 소비성향을 반영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재 거점무역관*을 지정**하여 현지 맞춤형 지원
 - * 시장정보조사, 현지 전시회 참가지원, 현지 바이어·유통망 발굴 지원 등 업무수행
 - ** (중국) 항저우, 선전, 상하이 / (유럽)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
- (프리미엄 소비재)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여 고급화 품목을 선정하고 R&D 지원('22년, 103억원), 수출사업* 선정 우대 등 지원
 - *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글로벌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K-스튜디오 우선 이용 등
- (해외인증)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국내 인증기관 해외시험소가 협력하여 「프리미엄 소비재 해외인증 특화 지원사업*」 실시
 - * 현지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인증 관련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취득 지원
- (소비재 수출지원 TF) 범정부 차원의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부처간-국가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3)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조기 성과 도출

◇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원전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필요 ('22.8월, 원전수출 전략추진委)

① (방산) 연간 수출 200억불 달성기반 구축('21년 72.5억불)

- (지원체계) 범부처 협업 및 현지 거점을 통한 지원 강화
 - 주요 국가에 방산선도무역관(코트라)을 확대하여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지투자-방산물자 수출 연계* 사업추진
 - * (해외사례) 프랑스 對인도 라팔전투기 수출시 원전건설, 철도인프라 등 포괄적 협력 추진
- (핵심시장 공략) 미국 등 핵심시장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세계 최대시장(年 600조 규모)인 미국 진출을 위해 韓·美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 추진, GVC 진입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 * 방산 협력시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율 규제, 관세 등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원사업) 방산 지원사업을 수출 확대 중심으로 개편
 - 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을 수출애로 예상 품목에서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사업까지 확대
 - 군수 분야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항공·우주 등 민수 분야로 확대하여 국방-산업 연계 패키지(안) 마련
 - * 방산물자 수입시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거래

② (원전)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추진체계) 원전수출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원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기술) 원자력 R&D에 금년 6,700억원, '23~'25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자
 - (인력) 주요 원자력 R&D 사업에 원자력 관련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진입 촉진
 - * 원자력 R&D 신규과제에 대학 참여비중 확대 : ('21) 14.3% → ('23~) 20% 이상

- (수출다각화) 한국형 노형, 기자재 등 수출 분야를 다각화하여 수출확대 및 원전생태계 활성화
 - (노형) 수주대상국 여건,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여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등을 망라한 수주전략 마련
 - (기자재)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가동(원전수출협회), 수출바우처 확대(35개社, 7.5억원 → 60개社, 13억원), 인증획득 등 중소 기자재기업 지원
 - (SMR)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기술투자 확대(~'28년, 4천억원) 및 우리 기업의 SMR GVC 진입지원
 - * 기술개발과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 운영('23~)
- (세일즈 통상) 정부간 채널 및 고위급 면담, 「원전수출지원공관」을 통한 수주대상국과의 현지 소통 강화 등 세일즈 통상 추진
- (금융지원) 프로젝트 사업주 금융지원, 이행성 보증·시설자금 지원
 - * 터키 원전 프로젝트 대상 기자재 수출 관련 수출보증보험 55억원 지원(~'22) 및 이집트, 체코 등 원전 프로젝트 관련 이행성 보증 등 다각적 금융지원 추진

③ (플랜트) 국제 감축사업 등 新시장 개척 지원

- (국제감축) ODA 연계·양자협정 체결 등 정부간 협력 확대, '23년 시범사업(160억원 규모) 착수 후 사업 대형화 추진('25년~)
 -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보조비율 차등화) 등을 통해 관련 수출 기업의 국제감축 관련 설비 수출 촉진
 - *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에 따라 직접비 보조 비율 차등화(30~50%)
 - 수은(여신상품 개발), 무보(지원요건 개선) 등 공적금융 지원 강화('22下)
- (플랜트 협력)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지원* 및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제고
 - *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등
 - ** 경제공동위, 산업협력위 등 장관(본부장)급 양자 협력
- (우크라이나 재건) 민간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적극 지원
 - * 민간 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무역협회에 소통창구 개설 추진

4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수출 총력 대응

① 무역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운영

- (무역투자전략회의)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개최(격월)하여 업종·지역별 무역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주력 제조업(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로봇 등) 및 유망 산업(화장품, 농식품, 콘텐츠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

무역투자전략회의 향후계획(안)

구분	발표 대책(안)
제1차 (10월)	▶ 동남아시아 시장 무역·투자 확대전략(베트남 플러스 전략) ▶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콘텐츠 등 경쟁력 강화 전략
제2차 (12월)	▶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 AI 로봇 경쟁력 강화 전략
제3차 (2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 대응전략 ▶ 그린산업 친화형 무역지원 제도 개편 방안
제4차 (4월)	▶ 전략적 유턴 및 외투 활성화 방안 ▶ 新무역안보전략

- (무역상황점검회의) 산업부장관 주재, 주요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산업부내 품목·지역 담당관* 등과 현황점검, 대응방안 논의(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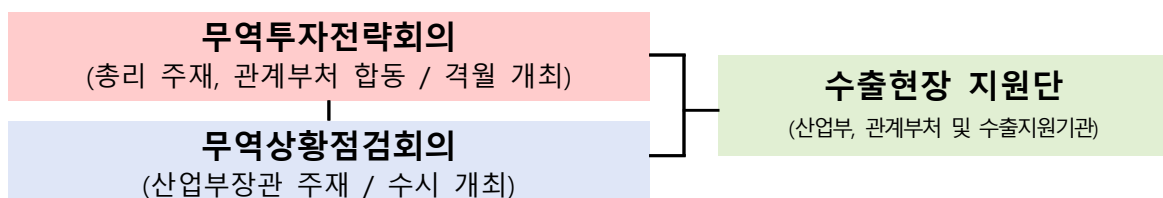
* 품목관(반도체·자동차·전자·바이오 등) 및 지역관(중국·미국·베트남 등) 지정-대응

②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는 “수출현장지원단” 가동

- 정부·무역유관기관 합동, 지역별로 찾아가는 「(가칭)수출현장지원단」 운영(9월~) → 현장애로* 맞춤형 해소 및 규제 개선

* (내용) 무역금융, 물류·통관, 수입규제, 공급망, 인력, 세제, 입지, 인허가 등 (일정) '22.9월~, 서울, 인천, 천안, 대구, 광주, 경남 등 지역별 현장방문 추진

민관합동 수출지원 총력대응체계



V. 향후 추진계획

주요 정책과제	소관 부서	시행시기
1.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 무역금융 연간 체결한도 상향(무역보험공사)	산업부	'22.11
▶ 수출 중소기업 금리우대(수출입은행)	기재부	~'23.8
▶ 수입보험 품목·한도 한시확대(무역보험공사)	산업부	'22.9~12
▶ 물류비 지원 확대(코트라)	기재부, 산업부	'22.9
▶ 중소기업 특별 저리융자 지원(무역협회)	산업부	'22.8
▶ O2O 수출상담회 붐업코리아 개최	기재부, 산업부	'22.11
▶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강화(코트라)	기재부, 산업부	'22.9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요건 완화	관세청	'22.9
2. 수출입 3대 리스크 대응 강화		
▶ (중국) ICT 융복합 등 맞춤형 협력강화	산업부	'22.4분기
▶ (중국) 4대 전략 그린산업 수출 지원	산업부	'22.4분기
▶ (중국)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고위급 협력 활성화	관계부처	'22.4분기
▶ (반도체) 반도체 특화형 무역금융 지원	산업부	'22.4분기
▶ (반도체) 펄리스·소부장 中企 마케팅 지원	산업부	'22.4분기
▶ (반도체) LNG·석유연료 대체 추진	산업부	'22.9
▶ (에너지) EERS 제도 본격도입	산업부	'23
▶ (에너지) 에너지 캐쉬백 전국 확대	산업부	'22.7~
3.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 주력 품목 R&D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기재부, 산업부	'22~'26
▶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 완공	산업부, 복지부	'24
▶ 바이오 분야 무역금융 한도 확대(무역보험공사)	산업부	'22~
▶ 2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парк 구축	산업부	'22~'25
▶ 소비재 거점 무역관 지정(코트라)	산업부	'23
▶ (방산) 방산선도 무역관 확대(코트라)	산업부	'23
▶ (방산) 핵심시장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이행	산업부, 방사청	지속 추진
▶ (원전) 원자력 R&D 확대	산업부	'23~'25
▶ (원전) SMR 사업단 설치·운영	산업부	'23
▶ (플랜트) 국제 감축사업 시범사업 추진	산업부, 환경부	'23
▶ (플랜트)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추진	산업부	지속 추진
4.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개최	국조실, 산업부	'22.10
▶ 산업부 장관 주재 무역상황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22.10
▶ 수출현장 지원단 운영	산업부	'22.9